

01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
- ② 혈연, 학연, 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한다.
- ③ 정당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⑤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 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하였다.

해설

② (x) 정실주의의 내용. 정실주의는 귀속성(연고성, 혈연·지연 등)과 정치성이 인사기준이지만 엽관주의는 귀속성(학연·혈연·지연 등)과 관련이 없고 정치성(당파성,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기준으로 한다.

• 미국의 엽관주의와 영국의 정실주의

구분	엽관주의(미국)	정실주의(영국)
기준	정치성(충성심, 당파성)	정치성 + 귀속성(학연·혈연·지연)
시기	19C 초 민주주의	17C 말 절대군주제
신분보장	신분보장 안 됨	신분보장 됨(생애직)
대량경질	전면경질(정권교체시)	부분경질(공석 발생시)
공무원행동기준	정당에 대한 충성	주로 정치가 개인에 대한 충성
실적제로의 전환	1883년 펜들턴법	1870년 2차 추밀원령

③④ (○) ■ 엽관주의의 장·단점

장점	①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하여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단, 정당의 당원을 공직에 임용하므로 기회균등은 아님). 많은 사람들이 정부 일에 참여하면서 공무원 체제의 민주성과 사회적 대표성이 높아지는 등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 확보.
	②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 가능.
	③ 공직경질을 통한 관료특권화나 관료침체 방지.
	④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공직에 임명되므로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 강화, 책임행정의 구현.
	⑤ 행정의 민주성·대응성 향상(엽관제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에 비해 국민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
	⑥ 동일한 정치이념을 지닌 자들로 공직이 구성되어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실현이 용이하므로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정치적 변혁이나 중요한 정책변동에 유리.
	⑦ 공무원의 적극적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더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어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을 강화시킴.
단점 · 폐해	① 비전문가의 임용에 따른 공직의 질 저하와 행정의 비능률성(비효율성)·비전문성 초래. ※장점 ⑥번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별할 것
	② 정권교체시 대량의 인력 경질로 인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일관성 저해.
	③ 공직취임·신분유지가 소속 정당이나 집권자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므로 관료의 정당 사병화, 특정 정당을 위한 봉사로 인해 행정의 공정성·공익성·중립성·대표성·책임성 보장 곤란.
	④ 소수에 의한 정당의 과도적 지배를 촉진하여 공직의 사유화·상품화 경향 초래. 위인설관(爲人設官) 등 불필요한 관직남설로 인한 예산낭비, 매관매직(賣官賣職)에 의한 정치적·행정적 부정부패 초래.
	⑤ 정당원만이 공무원에 임용되므로 기회균등원리에 위배.
	⑥ 신분보장 미흡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 직업공무원제 정착 곤란.

[②]

관련기출

1.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주로 학벌, 지연, 혈연과 같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오늘날은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③ 1883년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기회로 엽관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 ④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행정의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14 국가9급

- ①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 ②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 ③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 ④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 ⑤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3. 업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승진

- ① 업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미국에서 발전했다.
- ② 원래 임용권자와의 정치적 충성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 ③ 업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 ④ 오늘날 업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답 1. ② 2. ④ 3. ②

02 다음 내용 중 부패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 문제가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 ② 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 ④ 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은 체제론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① ①, ②

② ①, ③

③ ②, ④

④ ②, ③

⑤ ③, ④

해설

- ① (x) 사회문화적 접근에 대한 내용임.
 ② (x) 법적·제도적 접근에 대한 내용임.

▣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

도덕적 접근법 (행태적 접근)	개인적 특성론. 부패를 개인행동의 결과로 보고 개인의 윤리나 자질을 부패 원인으로 봄.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가 부패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부패의 사회적 맥락이나 규범과 실제간 간극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사회문화적 접근법	특정한 지배적 관습·전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봄(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례·선물문화나 보은의식을 부패 원인으로 보는 경우). 관료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파악. 공식적 법규보다 사회문화적 관습을 중시하는 후진국 부패현상 설명에 유용.
법적·제도적 접근법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법·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봄. 예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 규제기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모호한 법 규정, 행정통제 장치의 미흡 등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
체제론적 [체계적] 접근법	부패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부패에 대한 지엽적·부분적인 대응만으로는 부패를 억제하기 곤란하다고 봄. 부패현상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용이하나 부패통제 수단을 손쉽게 처방해주지는 못함.
권력관계 접근	부패는 권력의 오·남용에서 유발됨. 부패의 원인을 사회 내 권력관계에서 찾음. 관료엘리트가 정치사회 및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준귀족집단으로 처신하면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봄. 정치인이나 관료가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경우
시장·교환 접근	부패란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처럼 특수한 이득을 추구하는 시장 교환 관계 행위. 경제학자들은 정부 규제가 구성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창출하여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맥락적 분석 : 부패를 발전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으로 파악(기능주의) ② (의식)구조적 분석 : 공직자의 권위주의적 복종관계나 공직사유관에서 도출된 공직자의 <u>의식구조</u> 등이 부패 원인. ③ 권력문화적 분석 : 공익과 사익의 혼동, 공직사유관, 권력남용, 장기집권의 병폐 등을 포함한 미분화된 권력문화가 부패 원인. ④ 거시적 분석 : 행정통제의 미비, 비민주적 행정체제와 제도, 공직자의 욕구기대와 현실적인 보수구조와의 심각한 괴리 등이 원인. ⑤ 군사문화적 분석 : 건전한 정치문화의 미성숙과 군사문화의 구조화(권위주의적 정치와 관료주의적 정치)가 원인 ⑥ 시민문화의 환경적 분석 : 건전한 시민문화의 미비로 행정부패환경 조성. ⑦ 정경유착적 분석 : 개도국에서 고도경제성장의 모형과 불균형발전모형을 선택한 국가는, 군엘리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야합으로 부패가 발생.

답 ③

관련기출

1.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7급

- ①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 ②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③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변수로 본다.
- ④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본다.

2. 공무원 부패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09 지방7급

-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 ②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부패관리기구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 방법이다.
- ④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3. 공무원 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은?

2015 해경간부 / 2007 국가7급

- ①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를 야기한다.
- ②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
-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부작용이 부패를 발생시킨다.
- ④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패는 야기된다.

4. 공직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

2020 지방7급

- 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 ②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 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 1. ③ 2. ③ 3. ② 4. ①

03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를 담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① (x) 법인은 기부금 모금 대상이 아님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② (○)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 ④ (○)

제9조(담례품의 제공)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담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담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담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04 다음 내용 중 시험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구성타당성이란 결과의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복적인 측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 ㉡ 기준타당성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 ㉢ 내용타당성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 ㉣ 종적 일관성이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재시험법, 동질이형법, 이분법 등이 있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23년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① (x) 시험의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다.

④ (O) ■ 시험의 타당도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 타당도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예측한 정도	시험성적(예측치) = 근무성적 (기준에 대한 측정치)	선발시험성적과 업무수행실적의 상관계수 측정 ① 예측적 타당도(합격자, 정확성) ⑤ 동시적[현재적] 타당도(재직자, 신속·저렴)	경험적 검증
내용 타당도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구체적 지식·기술 등)'를 제대로 측정한 정도	시험내용 = 직무수행능력요소 (지식·기술). 측정지표가 지표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	능력요소와 시험내용의 내용분석 -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	논리적 검증
구성 [개념]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 요소'를 제대로 측정한 정도	시험내용 =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추상적 개념과 측정지표의 일치 정도)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개발과 고도의 계량분석 기법 및 행태과학적 조사. ⑦ 수렴적 타당성(동일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 상관관계 높아야 함) ⑨ 차별적 타당성(다른 개념을 동일 방법으로 측정, 상관관계 낮아야 함)	

④ (O)

■ 시험의 신뢰도 검증방법

재시험법 (Test - retest Method)	동일 시험을 동일 수험자에게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 후 두 점수 간 일관성 측정(종적 일관성 측정). 측정 간단. 시험간격설정과 동일 상황 설정 문제는 있음. 검사 시간 간격이 짧으면 측정요인 작용, 길면 역사·성숙요인 작용.	
동질이형법 (복수양식법)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을 동일 집단에게 실시 후 두 성적 간 상관관계 측정. 재시험법보다 연습효과·기억효과를 이지만 유사한 유형의 시험 개발 곤란. 2개 시험은 동시 실시(횡적 일관성 검증) 또는 다른 시간대 실시(종적 일관성 검증).	
이분법· 반분법	하나의 시험 내 문항을 두 부분(홀·짝)으로 분류해 각 부분의 점수 간 상관관계 측정(짝수 항 합과 홀수 항 합을 비교하므로 개별 문항의 신뢰성은 알 수 없음). 재시험법이 부적합하거나 동일 유형의 시험 제시가 곤란할 때 사용. 1회 시험으로 간단히 신뢰도를 계산하지만, 검사의 양분방법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다를 수 있음.	
문항 간 내적 일관성 검증법	시험을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각 문항 하나하나 간 상관관계를 종합해 시험의 내적 일관성 검증. 개인의 추상적 특성인 성격검사의 신뢰성 측정에 주로 사용. 개별 문항 간 상관관계를 검토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할 수 있음.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 상관계수가 많이 사용됨.	
종적 일관성	동일한 시험을 동일 대상, 다른 시간에 치르는 경우 측정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것.	④ 재시험법, 동질이형법
횡적 일관성	동일한 시험을 동일 시간, 다른 대상에게 치르는 경우 측정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것.	④ 동질이형법, 문항 내적 일관성 검증

답 ①

관련기출

1. 공무원 채용시험의 효용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2012 해경간부

- ① 구성타당성이란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의 부합정도를 말한다.
-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 ③ 내용타당성은 시험내용이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하는 정도이다.
- ④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결과로 나온 성적의 일관성을 뜻한다.
- ⑤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17 지방7급

- ①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이며, 재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 ②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서는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성적과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 ③ 내용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검증하게 된다.
- ④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구성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8급

- ①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 ②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 구성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측정지표 간의 일관성이다.
- ④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 ⑤ 차별적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p>4.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타당성과 그 검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기준타당성은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에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②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해 얻은 시험성적과 그들의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③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합격자의 시험성적과 근무를 시작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평가한 근무실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④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의 측정결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p>	2006 국가7급
<p>5.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① 구성개념 타당성 : 추상적 개념과 측정지표 간의 일치 정도 ② 내용 타당성 : 어떤 개념의 측정지표와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다른 기준과의 상관성 정도 ③ 기준타당성 : 측정지표가 지표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 ④ 차별적 타당성 :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p>	2012 지방7급
<p>6.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기준에 대한 틀린 설명은?</p> <p>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 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p>	2018 국가7급
<p>7. 채용시험의 구성타당성에 관한 설명은?</p> <p>① 채용시험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② 채용시험이 장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③ 채용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가? ④ 채용시험이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가?</p>	2008 국가7급
<p>8. 공무원 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타당성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p> <p>① 시험성적과 업무수행실적 기준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분석한다. ② 시험문제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해 시험내용의 동질성을 분석한다. ③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을 분석하여 양자의 부합도를 확인한다. ④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p>	2014 해경간부
<p>9. 소방공무원의 선발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방법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 내용과 나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 Ⓑ책형을 중앙소방학교 교육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② 내용타당성 –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발시험의 내용을 구성한다. ③ 기준타당성 – 소방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④ 구성타당성 – 지원자의 근력·지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만든 시험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와 기존의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p>	2014 지방7급

▣ 1. ③(㉠㉡㉠) 2. ③ 3. ③ 4. ④ 5. ① 6. ② 7. ① 8. ② 9. ③

05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목표를 설정한다.
- ② 결과지향적 관리전략으로, X이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 ③ 계급과 서열을 근거로 위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문화에서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
- ④ 목표달성과정의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환류를 특징으로 한다.
- ⑤ 양적 평가는 가능하나 질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

① (O) MBO는 기존의 일방적·지시적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의 상하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직단위와 개별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한 후 성과를 측정·평가·환류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관리기법이다.

■ MBO의 기본과정(절차) – 매년 동일한 과정을 반복·순환적으로 진행하는 성과관리방식



- | |
|--|
| <p>⑦ 전체 조직의 상위목표 설정 : 전체 조직의 목표인 상위목표는 팀에게 주어짐
 ⑧ 상·하급자 참여·합의를 통한 하위 목표(팀 목표와 개인 목표) 설정 : 조직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되 상하위 목표 간 연계가 되도록 함(목표-수단관계의 일관성). 직원이 타당성 조사와 사전조사를 거친 후 목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이를 검토해 직원과 쌍방 협의하여 결정. 목표는 조직의 자원이 뒷받침되어 실행 가능해야 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며 측정 가능해야 함.
 ⑨ 목표 추구 활동과 중간평가 : 목표가 설정되면 구성원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스스로 세운 실행계획기에 따라 목표추구 활동을 수행하고, 중간결과를 평가하여 합의된 목표에 환류시켜 부적절한 목표는 폐기·수정하며 목표성취 상황이 순조롭지 않으면 인적·물적 자원의 추가 공급.</p> |
|--|

- ② 참여식 기법에 의한 최종평가 : 목표성취 여부에 대한 판단.
- ③ 결과의 환류 : 평가 결과는 다시 환류되어 새로운 목표설정에 실질적 자료가 됨. 목표수행 시한이 되면 직원 스스로 업적을 평가하고 목표와 실제 결과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 조직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인사상 조치(성과급, 승진)·예산상 조치(목표달성을 따른 예산 차등 배분) 사용.

② (x) 투입·과정보다 목표달성이라는 결과(성과)를 중시하는 결과지향적 관리전략은 맞지만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 참여적 관리, Y이론적 관리, 조직의 민주화·인간화 강조

- ① 자아실현적 인간관, 상향적·분권적·자율적 관리
- ②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적 통합
- ③ 대내적 민주성 향상, 능력발전과 사기 양양
- ④ 상·하급자 간 신축적인 참여관리
- ⑤ 목표·역할의 명확한 인식을 통한 갈등·대립 감소, 조정방법, 조직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 구성원 간 상호이해 증진, 조직 내부 갈등의 건설적 해결 중시, 구성원 간 상호의존성·팀워크·협력의 강조
- ⑥ 관료제의 역기능(경직성·집권성·비인간성)을 보완하여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여 조직 동태화에 기여.

③ (O) 권위주의적·집권적·위계적 조직(수직적 계층제)에서는 업무분담이나 참여관리가 곤란하므로 MBO 적용이 어렵다.

⑤ (O) 추상적·질적·가치적·장기적 목표가 아닌 현실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적·양적·단기적·결과지향적·가시적인 목표(Objectives)를 중시한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에 집착하여 질적·장기적·본질적 목표를 경시하고 양적·단기적·가시적 목표에 치중하여 목표전환의 우려가 있다.

■ 목표관리(MBO)의 특징

MBO의 특ائز인 것	MBO의 특징이 아닌 것
유형적·양적·단기적·결과지향적·가시적 목표 중시. 목표전환 우려. 산출(output) 중시	추상적·질적·가치적·장기적·비가시적 목표 중시. 목표전환 방지. 결과(outcome) 중시
안정된 상황에 적합 분권화·참여·자율적·민주적 관리 Y이론. 통합모형. 자아실현인관 / 후기인간관계론	환경의 불확실성·유동성 상황에 적합 / 상황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 집권적·권위적·통제적 관리 X이론. 교환모형. 경제인관·사회인관 / 과학적관리론
결과(result)·목표 중시 목표달성을 초점, 환류 중시	과정(process)·수단 중시 행태변화에 초점, 환류 경시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목표모형 / 개방체제관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체제자원모형 / 폐쇄체제관
추진방향 - 상향적 내부 계선관료 중심 / 일반관리기법 활용	추진방향 - 하향적 외부 전문가 중심 / 행태과학적 지식(전문지식) 활용
대내적 민주성 궁극적 목적은 조직의 효과성·능률성(효율성·생산성)	대외적 민주성. 고객중심행정 궁극적 목적은 민주성
갈등의 건설적 해결. 협력을 통한 조직 전체의 효율성	갈등·대립 유발.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답 ②

관련기출

1.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회9급

- ① 목표설정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한다.
- ② 업무수행자의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고, 환류를 강조한다.
- ③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④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관리 방법이다.
- ⑤ 결과 지향적 관리 방법이다.

2.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관계가 없는 것은?

2004 국회8급

- ① Y이론의 인간형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 ② 직원들의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외부 전문가의 충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재고할 수 있다.
- ④ 자율적인 통제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 ⑤ 목표의 효과성이 제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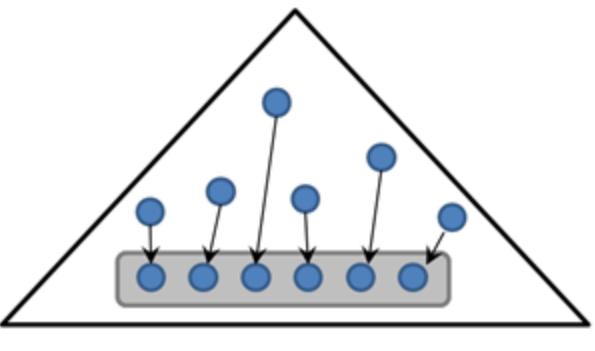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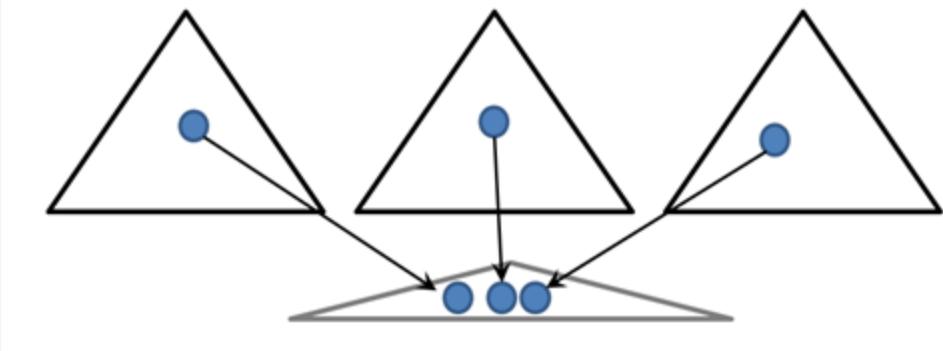
답 1. ③ 2. ③

06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태적인 조직은 경직된 계층적 관계보다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 ② 프로젝트팀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조직 형태이다.
-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생산구조를 조합한 것으로, 생산부서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원은 생산부서의 상관과 기능부서의 상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시를 받는다.
- ④ 태스크포스는 관련 부서들을 종적으로 연결시켜 여러 부서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조직 유형이다.
- ⑤ 애드호크라시 조직은 수평적 분화가 강한 반면 수직적 분화는 약하다.

해설

- ① (○) 동태적 조직 ≈ 유기적 구조 ≈ Adhocracy ≈ 탈관료제 : 수직적 계층제의 경직된 명령·복종관계보다는 분권화된 수평적 구조와 구성원의 자율성 부여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조.
 ② (○), ④ (x) 태스크포스는 관련 부서들을 횡적으로 연결

구 분	Project Team(특별작업반 ; 사업조직)	Task Force(전문담당반·전문기동반·전문조사반)
구 조	수평적 구조	입체적(수직적 + 수평적) 구조
존속기간	임시적·단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해체, 상설성 약함)	장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존속 경향, 상설성 강함)
규 모	소규모 (부문 내 설치) 	비교적 대규모 (부문 간 설치) 
성문화/ 설치근거	정부기구도표 상 표시 안 됨 /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	정부기구도표 상 존재함 / 법적 근거를 요함
전문성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약함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강함
성 향	인적 성격 강함 – 성원교체가 조직변화 초래	물적 성격 강함 – 성원교체와 조직변화 간 무관
소속관계	소속기관에서 탈퇴하지 않고 일시 차출 – 겸임, 시간제(part time제) 근무	정규부서에서 이탈해 전임제(專任制)로 근무 – 파견근무
업무내용 변경	업무내용 변경불가	업무내용 변경가능
지휘·감독 관계	팀의 장은 업무의 조정자·연락책임자에 불과	1인의 장이 지휘하는 계층제적 요소가 있음
예	경찰청의 각종사건전담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지원단	Hoover위원회, 우리나라의 과거 행정쇄신위원회
유사점	동태적 조직, 신축성(계층제적 경직성 완화), 전문성(태스크포스가 더 강함), 임시조직(태스크포스는 장기적 성향 더 강함)	

✓ 주의 : R. Daft는 수평적 조정기제와 관련하여 project team을 영구적 사업단으로 보고 관련부서 간 장기간 강력한 협동을 요할 때 적합한 조정기제라고 보았다. 즉 task force가 단기적·소규모, project team이 장기적·대규모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조정기제로서 문제가 출제되면 Daft의 견해에 따라 풀고, 동태적 조직의 유형으로서 양자의 비교문제로 출제되면 위 표에 근거하여 풀면 된다.

- ③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생산구조(사업구조)를 조합한 것으로, 이원적 명령체계를 특징으로 함.
 ⑤ (○) adhocracy는 조직구조변수로서 복잡성은 낮지만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고(탈계층제, 저층구조, 수평적 구조)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다. 단 수평적 분화의 기준은 기능별 동질성에 따른 분업체계가 아니라, 일의 흐름에 관련된 상호관련성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련 전문가 간 수평적 연계에 의한 대응으로 파악된다.

답 ④

관련기출

1.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1 국회8급

- ① 업무수행자가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방식을 법규나 지침으로 경직화시키지 않는다.
- ② 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
- ③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다.
- ④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협력업체들은 하위조직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다.

2.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7급

-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 ②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 ④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3.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9급(하)

- ①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②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 ④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답 1. ② 2. ① 3. ③

07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급기관과의 인사이동에 장벽이 있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 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기관들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 ④ 행정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정수준의 광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 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① (x)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국가(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서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상급기관과의 인사 이동에 장벽이 없으며 실제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인사이동이나 순환근무가 이루어진다.
- ② (o) 그 사례로서 국세청 - 지방국세청 - 세무서,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 지방경찰청 지청.
- ③ (o)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므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가 곤란해져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장점(필요성·설치이유)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의 전문성·통일성 ② 기능적 분권화 ③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수직적 기능 분담) ④ 지역별 특성 반영 ⑤ 근린행정 ⑥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⑦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 ⑧ 협력 및 광역행정 수행 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전달 통로 또는 현장과 결정기능을 연결하는 매개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② 집권화와 중앙통제의 강화 ③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④ 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저해, 주민참여의 곤란과 지방자치의 저해 ⑤ 주민의 혼란과 불편 초래, 현지성 확보 곤란 ⑥ 기관 상호 간 수평적[횡적] 조정 곤란 ⑦ 행정절차의 번잡하고 신속한 결정 곤란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중 유의할 항목

장점	단점
행정의 전문성·통일성 확보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원칙 중 종합성 원칙 저해.
지역별 특성 반영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행정의 민주성·책임성(책임행정) 저해, 지방자치의 저해
근린행정 :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	관할범위가 너무 넓어 현지성(주민참여와 주민의 효과적 통제 하에서 스스로 처리) 확보 곤란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신속한 결정 곤란

- ④ (o) 중앙 또는 인접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광역행정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광역적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 ⑤ (o)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 ①

관련기출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14 국가7급

-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 ② 고위공무원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 ③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22 경찰간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책임행정이 약해진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의 보완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이다.

답 1. ③ 2. ①

08 다음 제시된 내용의 설명과 행정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을 지닌다.
- ㉡ 행정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생각한다.
- ㉢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 ㉤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한다.

- ① 신공공관리론 - ①, ㉡ ② 신공공관리론 - ㉡, ㉣ ③ 신공공관리론 - ㉢, ㉣
- ④ 뉴거버넌스론 - ①, ㉢ ⑤ 뉴거버넌스론 - ㉡, ㉢

해설

신공공관리론(①, ②)	뉴거버넌스론(③, ④, ⑤)
정치행정이원론적 성격(시장성 중시)	①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다수 참여자에 의한 의사결정 중시)
행정관료를 공공기업가로 생각(기업가적 입장에서 공공문제 해결, 자율성과 재량권 강조)	㉡ 행정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생각(각자의 이해·주장을 효율적으로 정리, 제약과 책임 강조)
④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관료의 업무성과 제고를 통해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소극적·제한적 관점)	㉢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임(시민을 국정관리의 한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과의 신뢰·협력과 상호존중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 관점)
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 중시. 행정의 (절차적) 민주성, 정치성 중시

답 ⑤

■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 비교 정리

구 분	신공공관리론(1980년대)	신국정관리론·뉴거버넌스(1990년대)
시대배경	1970년대, 재정위기와 정부실패 ⇒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정권차원의 이념적 동기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 ⇒ 신뢰, 협동, 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을 강화
차원	정부가 민간부문과 연결하는 서비스전달망의 변화를 통한 미시적·실용적인 행정개혁 노력	네크워크, 파트너십, 공사협력, 신뢰 등을 강조하는 거시적·민주적인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
초점	결과 중심의 행정개혁 내부 프로그램 개편	과정·절차 강조. 정부와 사회조직 간 연결과 네트워크 형성
목적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능률성 제고	민주적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참여주의, 신공동체주의(시민주의+자원봉사주의)
서비스 생산방식	민간생산·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co-production) - 정부 + 민간
관료의 역할	공공기업가(기업가적 입장에서 공공문제 해결, 자율성과 재량권 강조)	네트워크 관리자·조정자(각자의 이해·주장을 효율적으로 정리, 제약과 책임 강조)
관리기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정부 내, 조직 내, 부문 내 관점)	수평적 참여네트워크 -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정부 간, 조직 간, 부문 간 관점)
관리메커니즘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확보	신뢰·협력과 직접 참여로 서비스 품질의 사전적 확보
문제해결 방식	시장적 방법, 민간경영기법 도입	정치적 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 방법 모색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이기적 존재)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공동체 주인이자 이타적 존재)
관리방식	고객 중심	임무 중심
지향가치	결과(outcome) 지향	과정(procedure) 지향 - 참여와 이해 조정
행정이념	효율성·생산성(시장원리 강조)	민주성·정치성(시민의 참여에 의한 결정)
분석수준	조직 내(intra-organizational) 관계, 부문 내	조직 간(inter-organizational) 상호작용, 부문 간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재창조
정치·행정 관계	정치·행정 2원론(시장성 중시), 탈정치화	정치·행정 1원론(다수 참여자에 의한 의사결정 중시), 재정치화
유사점	① 정부실패의 극복 - 작은 정부 ③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상대성, 협력 ⑤ 시민에 대한 대응성 ⑦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	② 정부역할 축소 - 직접적인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 ④ 「투입에 대한 통제」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 ⑥ 책임성 문제를 지님

관련기출

1.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회8급

- ① NPM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 ② 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 ③ NPM은 국민을 권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 ④ NPM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2원론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NPM은 행정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한 공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23 경찰간부'

-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를 노정기의 중심에 놓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관계를 강조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경쟁과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협력을 강조한다.
- ③ 신공공관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
- ④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조정자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본다.

답 1. ② 2.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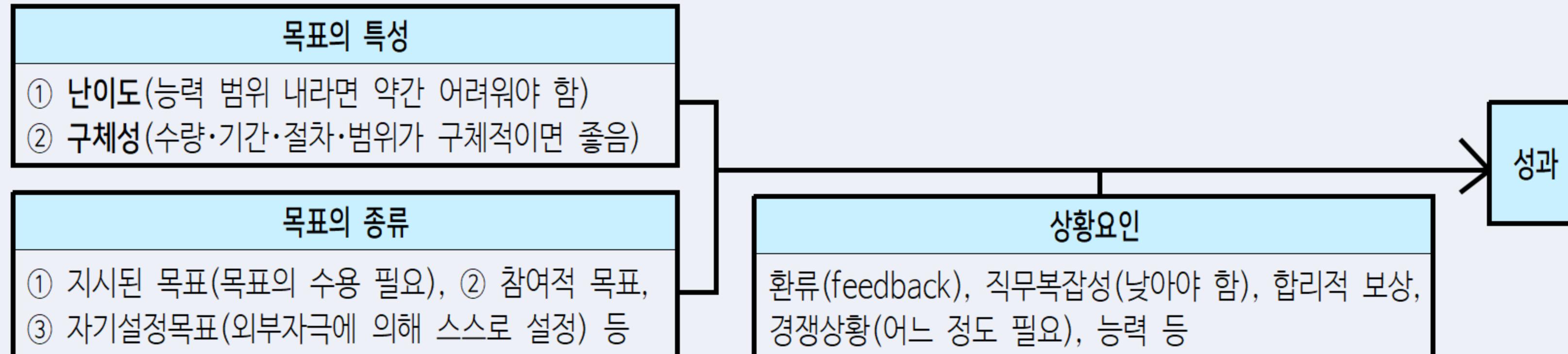
09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룸(V. Vroom)은 욕구충족과 직무수행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② 앤더퍼(C. Alderfer)는 매슬로우(A. Maslow)와 달리 상위 욕구가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강조하게 되는 하향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③ 로크(E. Locke)는 달성하기 쉽고 단순한 목표, 적절한 환경과 보상, 경쟁 등의 상황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④ 맥그리거(D. McGregor)는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본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 ⑤ 애덤스(J. Adams)는 개인의 행위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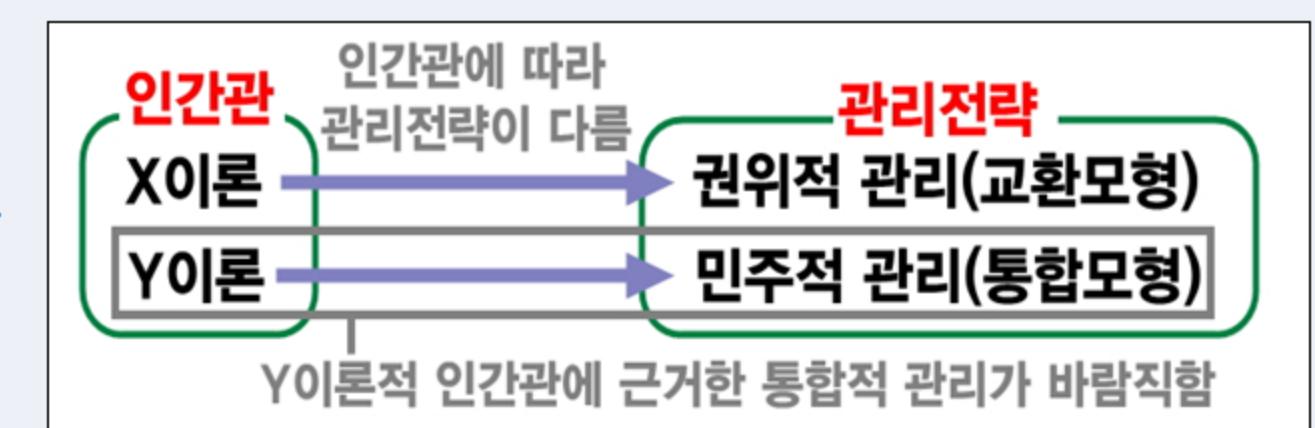
- ① (○)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의 욕구충족과 직무수행(성과) 간 직접적·적극적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욕구와 만족의 동기유발체계에 '기대'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동기유발과정을 설명한다. 예 돈 벌 욕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본다.
- ② (○) 앤더퍼(C. Alderfer)의 ERG이론 : 욕구의 세 가지 원리
- ㉠ 욕구 만족의 원리 : 각 단계의 욕구가 덜 충족될수록 그에 대한 욕구가 커짐.
 - ㉡ 욕구 강도의 원리 : 하위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욕구의 강도가 더 커질 것임(상향적 욕구 발현) ⇨ 만족·진행 접근
 - ㉢ 욕구 좌절의 원리 : 상위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하위욕구가 증대(하향적 욕구 발현) ⇨ 좌절·퇴행 접근
- ③ (✗) 로크(J. Locke)의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목표설정 이론은 개인의 성과가 목표의 특성 및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그 영향의 정도는 여러 가지 상황요인에 따라서 달라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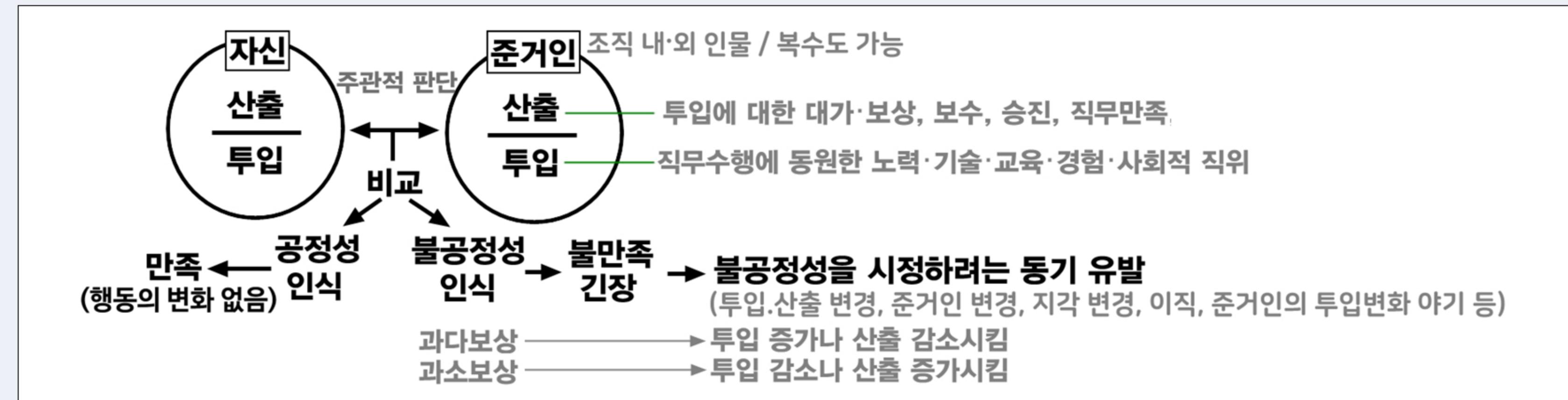


- 목표의 특성에서 목표의 난이도(difficulty)와 구체성(specificity)에 따라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 구체적인 목표는 인간에게 노력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전적인 목표(난이도가 높은 목표)는 노력의 강도를 높여주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목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너무 쉬운 목표는 성취감을 주지 못하므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너무 이상적이거나 성취할 가능성이 희박한 목표는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 버린다.
- 상황요인 중 노력에 대한 적절한 환경(feedback)과 합리적 보상이 있을 때, 목표달성을 위한 동료들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④ (○)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 일에 대한 상반된 태도·관점을 중심으로 2대별된 인간관에 따라 관리전략·동기부여 방법이 다르다고 보았으며, 명령·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X이론을 비판하고, 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한 이상적 Y이론을 제시하였다.



- ⑤ (○) 아담스(J. Adams)의 공정성(형평성) 이론(Equity Theory)



답 ③

관련기출

1.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8급

- ① 앤더퍼(Alderfer)의 ERG이론 – 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 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 ③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동기는 학습보다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것으로 친교욕구, 성취욕구, 성장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동기부여의 정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⑤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의 설정과 목표성취도에 대한 환경의 제공이 업무담당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성취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2.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앤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될 경우 하위욕구가 중요한 동기유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보상은 개인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보수체계는 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 ④ 로크(J.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의 구체성에 따라 직무성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 ⑤ 매슬로(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ERG이론의 존재욕구와 유사하다.

3.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4 서울9급

- ㉠ 허츠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① ㉠, ㉡, ㉢, ㉣ ② ㉠, ㉡, ㉓ ③ ㉠, ㉡, ㉣ ④ ㉡, ㉓ ⑤ ㉓, ㉣

4. 주요 동기부여 이론과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부여 방안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7 서울7급

-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유인으로 제시한다.
-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평이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 ③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 – 낮은 보수를 인상한다.
- ④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한다.

5. 다음 내용의 설명에 해당하는 동기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경재9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을 잘 봐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음 시험에 평균 5점을 더 높여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 ① 강화이론 ② 기대이론 ③ 형평성이론 ④ 목표설정이론

1. ③ 2. ③ 3. ④ 4. ① 5. ④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퍼슨(T. Jefferson)은 엄격한 법적 및 헌법적 제한을 통해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비답(D. Beetham)은 관료제 모형을 정의적, 규범적, 설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베버(M. Weber)의 관료제 이론을 정의적 모형에 포함시켰다.
- ③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의 탈정치화를 제안하였다.
- ④ 테일러(F. Taylor)는 관리의 지도원리로 계획, 표준화, 능률화 등을 제시하였다.
- ⑤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은 레이건(R. Reagan) 행정부 ‘정부재창조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해설

- ① (○)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 : 제퍼슨(T. Jefferson)은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 보장·증진이므로 정부는 시민에게 책임져야 하며 표명된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된다는 국가권력의 분권화를 주장. 개인의 권리·자유의 극대화를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정부는 제한된 정부라고 정의하고 가능하다면 일반대중(grass-roots)에 접근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 폭넓은 일반대중의 참여, 특히 행정에의 자발적인 대중의 개입을 조장.
 - ㉡ 제한된 행정이 가능하도록 권력분산의 극대화, 시민의 엄격한 감시 하에 정부를 두어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부 지향.
 - ㉢ 행정행위의 단순성(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 가능한 것)과 경제성(정부의 낭비·무절제를 최소화) 강조
 - ㉣ 독재적 행정관료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권력에 엄격한 헌법적·법적 제한을 두어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 확보.
 - ㉤ 행정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여 행정관료의 역할을 좁히고 전문적인 것이 되도록 할 것,
 - ㉥ 행정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권리 보호, 행정권의 제한과 보통교육을 통한 공공업무에의 참여 증진.

해밀턴주의	능률적 행정 강조	강력한 중앙정부	연방주의자	중앙집권	행정부 우위
제퍼슨주의	민주행정 강조	최소의 행정, 자유주의	주정부우위	지방분권	입법부 우위

② (○) • 비탐(D. Beetham)의 세 가지 관료제 모형

정의(定義)적 모형 Definitional Model	definition test	관료제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관련됨.
규범적 모형 Normative Model	normative standard	조직의 능률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관료제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탐구
설명적 모형 Explanatory Model	explanatory framework	정책 형성과 실행을 위해 관료제가 실제로 기능하는 방식과 기능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틀에 초점

• 베버(M. 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는 도덕적 이상이나 모범, 규범적 선호상태(Normative Model)가 아니고, 현존하는 실제 조직에 대한 기술(記述)·설명(Explanatory Model)도 아니다. 이념형 관료제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개념으로서 현실의 대규모 조직체를 이념형 관료제와 특성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정의(定義)적 모형에 해당한다.

③ (○) 윌슨(W. Wilson)은 1887년 발표한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에서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창하였다.

④ (○) • 테일러(F. Taylor)의 과업관리

- ①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작업 방식 강조,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의 최선의 방법과 수단(the one best way)을 모색
- ② 동작·시간연구를 통해 작업여건의 표준화, 공구의 표준화
- ③ 계획과 작업 분리의 원칙(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구분) : 관리층은 계획기능을 맡고, 근로자의 작업기능을 지원, 계획은 시간연구나 동작연구, 또는 기타 과학적으로 얻어진 정확한 자료에 따라서 설정
- ④ 차별적 성과급제 : 과업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생산량에 비례)으로 동기부여와 함께 과업달성을 유도하는 통제 가능.
- ⑤ 예외에 의한 관리 : 관리층은 돌발적이고 예외적 사안만 담당하고 일상적 업무는 부하에게 일임.
- ⑥ 기능적 직장제 : 각 기능분야에 지식과 기술에 의해 선발된 전문적 감독자에게 기능별로 감독업무를 맡김(감독의 분업).

⑤ (✗)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는 「Reinventing Government :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1992)」에서 정부의 능률성·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혁모형으로 조타적(操舵的)·경쟁적·임무지향적·결과지향적·고객지향적·예견적·분권적·시장지향적인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를 처방하였다. 이는 1990년대 미국 클린턴 정부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운동에 직접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답 ⑤

11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을 전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 ② 비공식조직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조직이다.
- ③ 공식조직은 조직 자체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비공식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한다.
- ④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의 경직성 완화, 업무 능률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비공식조직 간 적대감정이 생기면 조직 내 기능 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설

- ① (✗), ② (○) 비공식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여 존재한다, 공식적 조직 내에서 공식적 업무와 관계없이 인간관계(친근성, 상호접촉)를 토대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조직이며 사적 성격의 목적을 추구한다.
- ③ (○) 공식조직은 조직목표달성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을 할당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명확한 조직이다. 반면, 비공식조직은 구성원의 인간적 욕구 충족을 우선시한다.

■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구 분	공식조직(제도적 조직)	비공식조직(자생적 조직·비제도적 조직)
의의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기능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도화된 조직. 조직목표달성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을 할당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명확한 조직	공식조직 내에서 구성원 상호 간 인간관계(친근성, 상호접촉)를 토대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식조직에 비하여 신축성을 가진 조직
생성·소멸	인위적·계획적으로 형성·소멸	자연발생적·자연소멸적 성격
제도화	법령상, 직제상, 제도적 조직 성문화(문서상 조직), 권위적, 단일 기능적, 정태적, 경직성	동태적 인간관계로 형성된 비제도화된 조직 비성문화(非成文化), 비권위적, 다기능적, 동태적, 융통성
합리성	합리적 성격(조직목표달성)	비합리적 성격(인간적 관계 형성)
강조이념	능률의 원리(기계적 능률)	정서·감정의 원리(사회적 능률), 인간화, 민주성
형태	외면적, 외재적, 가시적	내면적, 내재적, 비가시적
활동성격	전체적 질서를 위한 활동, 비교적 대규모	부분적 질서를 위한 활동, 비교적 소규모
목적	공적 성격의 목적 추구	사적 성격의 목적 추구
조직목표	보통 공적 목표는 하나뿐이고, 목표를 향해 조직 전체가 통합됨	구성원의 욕구 또는 소망의 다양성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짐.
규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공식적 규범 작성	구성원간 상호작용에 의한 집단규범(group norm)
인간관	합리인·경제인, X이론 수직적 계층관계	사회인, Y이론 수평적 대등관계(단, 신분·지위체계는 있음)
관련이론	고전이론(과학적 관리론, 원리접근법, Weber의 관료제)	신고전적 조직론(인간관계론)

④⑤ (○)

■ 비공식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역기능
① 구성원들의 귀속적 욕구 충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형성 ② 공식지도자가 비공식 조직 소속이면 소속 공무원의 적극 협조를 통해 지도자의 능력 보완 ③ 비공식적 의사전달 통로(채널). 공식적 의사전달 보완(공식 조직을 통해 얻지 못하는 정보를 얻게 해 줌. 비밀정보망으로 기여). ④ 공식조직(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적응성을 부여해 줌. ⑤ 조직 내 고충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사기와 생산성을 높임(공식 조직의 규정, 절차의 엄격한 집행, 업무 및 인사 관련 불만과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좌절과 사기저하를 미연에 방지) ⑥ 구성원 간 협조와 지식·경험의 공유를 통한 업무의 능률적 수행, 쇄신적 분위기 조성 ⑦ 구성원 간 행동규범을 확립하여 사회적 통제 기능 수행	① 적대감정 형성(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비공식조직간)시 공식조직의 기능 마비 ② 관리자의 소외 및 공식적 권위의 약화 우려 ③ 비공식적 의사전달의 역기능(왜곡, 근거 없는 정보) : 정보의 공식적 이용 곤란, 의사결정에 활용 곤란, 정보의 사전누설 ④ 조직 내 파벌을 조장하고 반목, 분규를 야기하여 공식조직의 응집성을 저해(비공식조직 자체의 응집성 강화는 파벌화에 따른 자기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므로 공식조직 전체의 응집성을 저해하게 됨) ⑤ 정실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구성원 간 신뢰 훼손 ⑥ 비생산적 규범(norm) 형성 ⑦ 개인적 불안을 집단적 불안으로 확산시킴. ⑧ 조직 전체보다 비공식조직의 이익을 앞세울 우려가 있음.

답 ①

관련기출

1. 비공식적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 경찰승진

- ① 비공식적 조직은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어디까지나 공식적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을 말한다.
- ② 비공식적 조직은 각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확립하여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 비공식적 조직을 파악하는 데는 연결망 분석의 일종인 소시오메트리(Sociometry) 기법이 유용할 수 있다.
- ④ 비공식적 조직은 비밀정보망으로 기여하게 되며 이는 공식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2.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4 행정고시

- ① 비공식적 조직은 어디까지나 공식적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을 말한다.
- ② 비공식적 조직은 구성원 간에 강력한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 ③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와 유사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심리가 비공식적 조직을 탄생시킨다.
- ④ 비공식적 조직은 신분체계와 지위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평등관계를 확립한다.
- ⑤ 비공식적 조직은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기와 생산성을 높여 줄 수 있다.

3. 비공식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① 조직의 공식적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다.
- ② 공식적 의사소통이 왜곡되고 정실행위가 발생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방해가 될 수 있다.
- ③ 공식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조직 내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므로 항상 소규모로 유지된다.
- 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업무수행에 따르는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다.

답 1. ④ 2. ④ 3. ④

12 다음 내용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 ㉡ 정책목표의 설정이 용이하다.
- ㉢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 ㉣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 ㉤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 관리가 용이하다.
- ㉥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 용이하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 (○) 사업별로 산출근거가 제시되므로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 ㉡ (✗) 예산편성단위는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개별 활동(activity)이나 중간산출(output)에 초점을 두므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목표를 고려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정책목표(outcomes)가 반영되지 못한다. 개별적인 단위사업을 중시하므로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가 약하며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등 계획·기능·활동 간의 비교·측정에 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 ㉢ (○) 예산서에 사업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활동별로 재원이 배분되며 배분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예산(재원)과 사업을 직접 연결시킨다.
- ㉚ (✗) 세부사업별 예산액 = 업무량(activity) × 단위원가. 업무단위(work unit : 성과단위)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로 하나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업무수행활동이나 최종산물(성과·실적)로 표시(예 방역활동 3회는 활동, 건설된 도로 1km는 최종산물)된다. 업무단위는 계량화·표준화되어야 하며 동질성(단위 내용이 매년 동질적일 것), 영속성(임시적으로만 사용되는 단위는 피함), 계산가능성·가시성(측정·계산 가능하며 완결된 업무를 표시), 단순성(단위 내용은 단순할 것), 하나의 사업의 업무단위는 가능한 한 단수일 것(복수의 업무단위는 혼란 초래),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용어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동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최종산출물을 찾기 힘들어 업무단위 선정이 어렵다. 업무단위가 최종산출물이 아니라 중간산출물인

2023년 국회직 8급 행정학

-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궁극적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수단(중간목표)과 목표(최종목표)가 전도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 (O) 품목별 예산되는 투입되는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부사업의 성격 파악과 사업성과 평가가 곤란하지만 성과주의예산은 투입과 산출을 비교·평가하여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환류기능도 강화되므로 사업관리가 용이하다.
- Ⓑ (X) 단위원가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려면, 고도의 전문적 회계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감가상각·원가회계 등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를 채택시 단위원가의 계산이 곤란하다.

[답] ②

관련기출

1.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의 장점이 아닌 것은?

2018 서울7급(2)

- ①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 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 ②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 ④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6 국가9급

-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 ⑤ 총괄계정에 적합하지 못하다.

3.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2010 국가9급

- ㉠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 ㉡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 ㉢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 ㉣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답] 1. ① 2. ① 3. ②

13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검토하는데,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된다.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점적 정부관료제는 정부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계약(contracting-out), 민영화, 정부 부처 간 경쟁 등과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 ① 혼합주사모형 ② 만족모형 ③ 회사모형
④ 공공선택모형 ⑤ 합리모형

해설

공공선택이론의 특징이다.

-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 공급 비용의 극소화와 시민 편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생산은 공공부문을 시장경제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동시에 조직화된 압력단체들의 영향력 하에 이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편향적으로 공급하고 주된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본다. 공공서비스 제공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야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다원조직제** : 오스트롬이 주장한 민주행정 패러다임의 개혁 처방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둔다. 조직설계의 획일주의를 타파하고 유기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야 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효율화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재 공급·소비의 여건에 적합한 공급조직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다원조직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중참여를 제도화하는 조직구조로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하여 자치적으로 활동할 시민공동체(citizen collectivities)의 구성을 허용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 시민들은 자조적으로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고 공공재를 공동생산하거나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답] ④

14 2023년 국회직 8급 행정학

14 다음 내용 중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 ㉡ 전자정부는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정보시스템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전자정부의 경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① ㉠, ㉡
④ ㉢, ㉣

② ㉡, ㉢
⑤ ㉢, ㉣, ㉤

③ ㉣, ㉤

해설

- ㉠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 ㉡ (○)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실현하고 나아가 전자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시키는 개념이다.
 -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기본계획(기관별 계획) 수립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기관별 계획을 종합한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제시된 지문이 틀린 이유는 ‘해당기관의’라는 말이 빠져서 틀린 것일 뿐이다(아래 기출문제 답은 ①번이며 ②번 지문이 옳은 지문임을 확인 바람).

• 전자정부법 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21 지방7급

- ① 고등교육법 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주체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주체, 수립주기	비고
해당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기관별 계획)	행정기관등의 장이 5년마다 수립.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등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행정사무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계획을 종합한) 전자정부기본계획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무관장기관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립 사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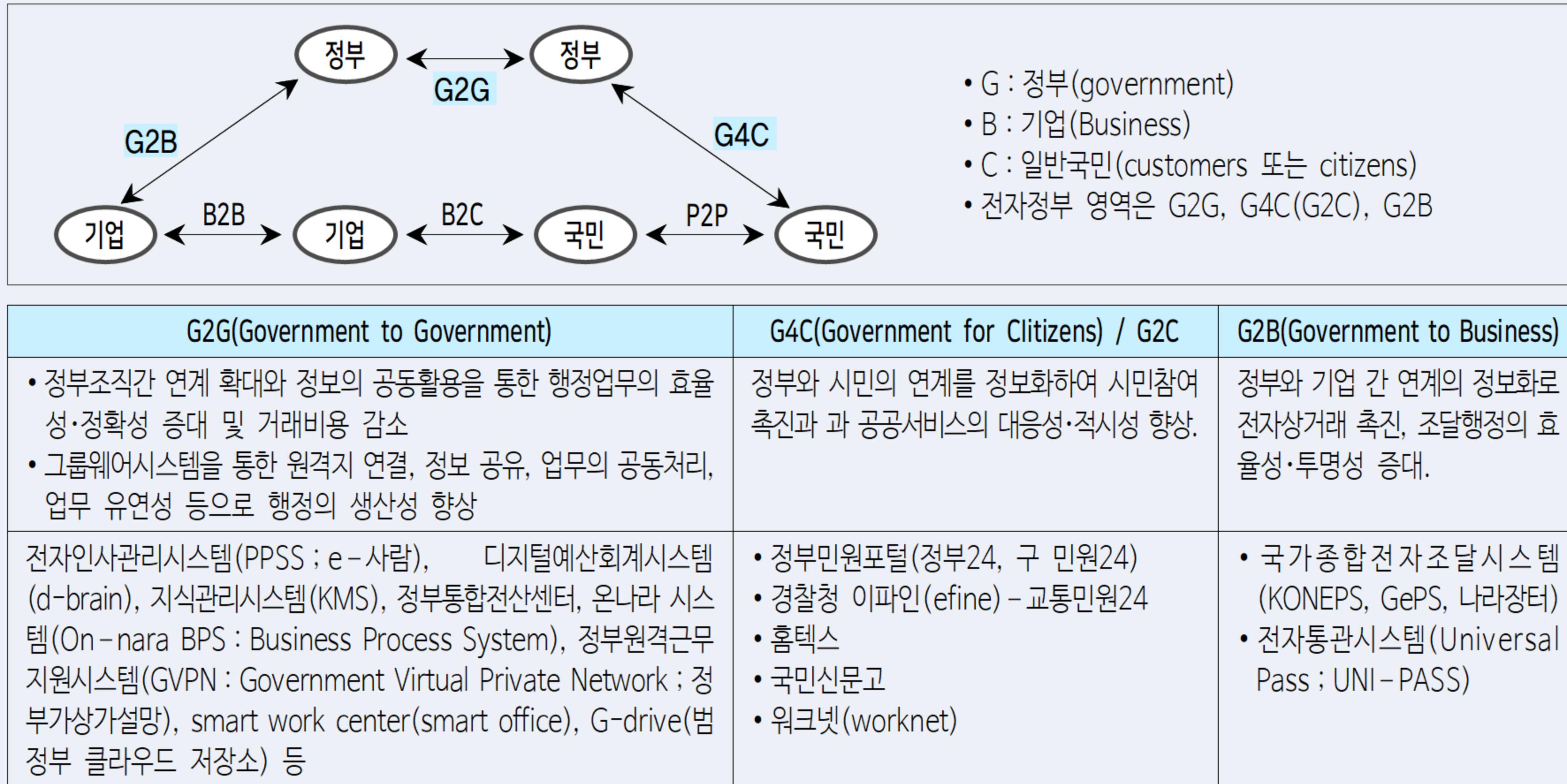
해당 기관별 전자정부기본계획 (행정기관등의 장이 5년마다 수립)	(기관별 계획을 종합한) 전자정부기본계획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5년마다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 •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기본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 국회 전자정부기본계획 : 국회사무총장이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모든 정부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⑥ (○) 업무처리절차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는 비용·품질·서비스·속도 등 조직의 핵심적 성과요인의 획기적인(Dramatic) 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Process)를 근본적으로(Fundamental) 검토하여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을 수요자(고객) 위주로 기본에서부터 혁신적으로(Radical) 재설계하는 기법이다. dBrain, KONEPS은 BPR을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축소·재설계하고 정보 시스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⑦ (✗) 전자정부의 경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G2G)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정부와 기업 간(G2B), 정부와 국민 간(G2C,

G4C)의 관계도 포함한다.

■ 상호작용관계에 따른 전자정부의 분류(G2G, G2B, G4C 또는 G2C)



③

관련기출

1. 전자정부법 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21 지방7급

- ① 고등교육법 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2. 「전자정부법」 상 전자정부에 대한 틀린 설명 것은?

2020 서울9급

-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공개대상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

-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① 1. ② 2. ④ 3. ③

15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 ② 지방재정법은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 ③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다.
- 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해설

- (○) • 재정민주주의 : 재정주권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있다는 납세자주권 원칙. 국민은 과세와 공공서비스 수혜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예산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
- 재정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의 국민 참여와 통제장치

구분	소극적	적극적
사전적	재정정보공개제도(예산편성안 공개)	주민참여예산제도
사후적	재정정보공개제도(결산정보 공개), 시민예산감시운동	납세자소송, 주민감사청구제도

- (x), (○) 지방재정법 상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뿐 아니라 사업집행·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단,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참여범위에서 제외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 연혁

주민참여예산제	①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가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② 2006년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규정. 자율적 시행 ③ 2011.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 ④ 2019.1.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로 개정하여 사업집행·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함(단,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
국민참여예산제	국가(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는 2018년에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본격 시행.

- ③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통령령x)로 정한다.
- 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두어야 한다 x).

[+] ②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령 규정

지방 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시행할 수 있다 x).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두어야 한다 x).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실시하여야 한다x).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통령령x)로 정한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반영해야 한다x)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 한다x).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통령령x)로 정한다.

관련기출

1.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③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2.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20 국회8급

- ①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 ②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방체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⑦, ⑨ ② ⑨, ⑩ ③ ⑨, ⑩ ④ ⑨, ⑩ ⑤ ⑨, ⑩

3.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 지방7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 1. ② 2. ① 3. ③

16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적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리더십 유형을 분류한다.
- ② 권위형은 의사결정권이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직무수행에 중심을 두는 유형이다.
- ③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에게 자유재량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유형이다.
- ④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민주형, 자유방임형, 권위형 순으로 피험자들이 선호했다.
- ⑤ 민주형은 참여와 토의를 강조하는 유형으로서, 정책문제와 절차는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해설

① (○) ■ 리더십 본질에 대한 행태론(행동유형론)

관찰가능한 리더의 행태 분석.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유형 있음.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유형에 맞춰 리더십 교육훈련 추종자와의 교환관계를 중시하여 거래적 리더십 연구에 주력.

- ① Michigan 대학, Likert : 직무(생산)중심형, 직원중심형(생산성, 부하의 만족감 높임)
- ② Lewin, Lippitt, White - 아이오와(Iowa) 대학 : 권위형, 민주형(생산성과 사기가 모두 높아 가장 효과적), 자유방임형
- ③ Ohio 대학 : 구조설정 vs 배려기준 4가지 유형. 높은 구조설정능력과 높은 배려행태일 때 가장 바람직.
- ④ Blake와 Merton : 관리망(생산 vs 인간) -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중도형, 단합형(팀형)으로 구분. 이상형은 단합형(9,9).

①②⑤ (○) ④ (×) 화이트(R. White)와 리피트(R. Lippitt)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민주형, 권위형, 자유방임형 순으로 피험자들이 선호했다.

■ 르원(K. Lewin), 리피트(R. Lippitt), 화이트(R. White) - 아이오와(Iowa) 대학의 리더십 연구(1958)

- ㉠ 권위형(Authoritarian, Autocratic) : 지도자가 중요 결정을 홀로 내리고, 부하에게 따르게 함.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작은 경우 적합하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음. 생산성은 민주형과 비슷하나 업무의 질, 구성원의 만족도·사기는 민주형보다 낮게 나타남.
- ㉡ 민주형(Democratic) : 지도자가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 개인주의·민주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 적합. 직원의 창의력·근무의욕을 높이지만, 권위주의적이며 참여의 기대가 별로 없는 경우 시간이 낭비되고, 성과가 미흡. 민주형이 생산성과 사기가 모두 높아 가장 효과적이라고 봄.

유형	권위형(독재형)	민주형
관점	업무 중심적(추종자에게 지시·명령)	인간관계 중심적(추종자의 참여와 자율성)
권력기초	지도자의 직위	지도대상집단의 동의
인간관	X형(게으르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	Y형(자기규제적,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음)
목적	지도대상집단의 임무수행, 조직의 필요	추종자의 만족, 인간관계
감독	추종자 행동을 면밀히 통제·감시	추종자의 자율성 존중, 일반적 감독
의사전달	윤형(wheel type), 정보독점	개방형, 부하와 지도자 간의 의사전달 원활
결정	참여 거부	참여 촉진, 권력과 책임의 적절한 위임

- ㉢ 자유방임형(Laissez - Faire) : 지도자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구성원의 재량을 최대한 인정. 구성원의 능력이 고루 우수하고, 고도로 전문직업적인 업무인 경우이며, 자율성이 발휘됨. 그러나 구성원이 무능력하거나, 일상적 업무인 경우에는 규율이 서지 못하고, 일의 진행이 지연되어 성과가 저하됨. 통제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리더십으로서의 의미는 없음.

답 ④

17 다음 내용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
- ㉣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① ④
- ② ③, ⑤
- ③ ①, ②, ③
- ④ ①, ③, ④
- ⑤ ①, ②, ③, ④

해설

㉠㉡㉢㉠㉡은 지방자치법 제13조 ②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률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이다.
cf)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유통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됨.

■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등(각 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	⑨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⑩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⑪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⑫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⑪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⑫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⑭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기반	⑮ 공유재산관리 ⑯ 주민등록 관리 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⑮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⑯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⑱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⑲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⑳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㉑ 묘지·회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㉒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㉓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㉕ 농·축·수·어(漁) 등 농업용수시설 설치·관리 ㉖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㉗ 농업자재의 관리 ㉘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㉙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㉚ 농가 부업의 장려 ㉛ 공유림 관리 ㉜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㉝ 가축전염병 예방 ㉞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㉟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㉟ 중소기업의 육성 ㉟ 지역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지원 ㉟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㉟ 지역개발사업 ㉟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㉟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㉟ 지방도(地方道)·시도·군도·구도 신설·개수·유지 ㉟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㉟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㉟ 자연보호활동	㉟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㉟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㉟ 소규모수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㉟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시립공원·군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㉟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흉류양식 설의 설치 및 관리	㉟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㉟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㉟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㉟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㉟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㉟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㉟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㉟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㉟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㉟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㉟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㉟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㉟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㉟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답 ⑤

관련기출

- | | |
|--|------------------|
| 1.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아닌 것은? | 2010 지방7급(지방자치론) |
| 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② 양곡의 수급 조절 ③ 가축전염병 예방 ④ 중소기업의 육성 | |
|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11 지방7급(지방자치론) |
| 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
|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옳지 않은 것은? | 2015 서울7급(지방자치론) |
| 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②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③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④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
| 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19 서울9급(1) |
| ①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②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③ 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④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
|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16 지방7급(지방자치론) |
| ① 국가적 차원보다는 지방적 차원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상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
③ 사무집행에 따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이 원칙이다.
④ 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단체위임사무보다 제한된다. | |

답 1. ② 2. ① 3. ② 4. ③ 5. ④

18 정책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 ② 다원주의 정치와 조합주의 정치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제정책의 경우 분배정책보다 나눠먹기(pork-barrel)나 담합(log-rolling)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 ④ 합리모형은 분석적 접근방법에 가깝고, 점증모형은 경험적 접근방법에 가깝다.
- 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설

- ① (○) 규제정책의 경우 규제대상집단(비용부담집단)의 정치적 반발이 심하고,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집행시 규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공권력(강제력)을 행사하며 이 경우 행정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
- ② (○) 편견의 동원은 지배엘리트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쟁점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작용인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 ③ (✗) pork-barrel, log-rolling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분배정책이다. 분배정책의 경우 수혜자집단들이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는 나눠먹기식정치·돼지구유통정치(pork barrel politics)가 나타나거나, 승자와 패자간 정면대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서로 로그롤링(log-rolling; 담합), 투표의 거래(vote trading)가 이루어진다.
- ④ (○) 합리모형은 계량적 분석에 의한 체계적·분석적 접근방법, 점증모형은 다양한 정책관련자간 타협·조정에 의한 현실적·경험적 접근방법.
- ⑤ (○) 협의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제설정과정과 관련되지만, 광의의 무의사결정은 정책과정 전반을 통해 나타난다.

[+] ③

관련기술

1.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소방간부

- ① 알몬드(Almond)와 파웰(Powell)은 정책을 구성정책, 추출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유형화했다.
-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양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 ③ 로위(Lowi)의 정책유형론은 정책유형들 간의 높은 상호배타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④ 로위(Lowi)에 따르면 규제정책에서는 포크바렐(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⑤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따르면 보호적 규제정책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우려가 적어 참여자 사이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다.

2.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2 군무원9급

- ① 구성정책은 대외적으로 가치배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결정한다.
- ② 규제정책은 국가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순응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 ③ 분배정책은 집단 간에 '나눠먹기식 다툼(pork-barrel)'이 일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 ④ 추출정책은 정부가 집단 간에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9급

-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 ② 일반적으로 포크바렐(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4.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7급

- ① 배분정책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바렐(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재분배정책 :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침례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 ③ 경쟁적 규제정책 :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 ④ 보호적 규제정책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 가능성이 높다.

[+] 1. ② 2. ④ 3. ① 4. ③

19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규제는 수행과정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②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을 내부화할 필요성이 있다.
- ③ 자유시장이 자원배분에 효율적이더라도 국가의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재(demerit goods) 관점에서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가 내세운 전제조건과는 달리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거래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줌으로써 지대추구 행위를 막을 수 있다.

해설

- ① (○) 정부규제의 근거 중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입.
- ② (○) 외부효과는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면서도 비용·대가의 지불이 없어 재화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외부효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편익이나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비용을 고려해 적정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개입에 의한 내부화로는 벌금, 과세, 보조금, 오염배출건거래제 등이 있고 사적 해결방안으로서의 내부화는 합병, 자율적 협상(코즈 정리)이 있다.
- ③ (○) 비가치재(demerit goods)는 소비자가 그 재화가 주는 효용·쾌락을 과대평가하고 비효용·고통을 과소평가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다(예 술, 담배, 매춘, 마약 등). 정부는 비가치재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게 된다. 시장에서 비가치재에 대한 수요·공급에 있어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더라도 국가의 윤리적·도덕적 판단에 의해 정부규제가 정당화 될 수 있다.
- ④ (○)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 : 외부효과 문제를 정부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자율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전통적 시각인 정부개입에 의한 피구제나 보조금과 달리 현대적 시각에서 제시된 내용. 코즈(R. Coase)는 ⑦ 어느 일방에게 소유권·재산권(Property rights)이 잘 정의되어

20

2023년 국회직 8급 행정학

있고, ⑤ 민간 경제주체인 이해당사자 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합의 도달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이 거의 없이 자원배분에 관한 자율적 협상이 가능하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정부개입 없이 시장에서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최적 생산량 달성)되게 된다고 주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권 설정이 곤란하고, 정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비용·불신이 존재하므로 현실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 ⑤ (x) 정부규제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지대추구와 포획에 따른 제도적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인허가제(경쟁적 규제, 진입규제)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라 특정 업체만 공급권을 가지면 제도적 독점이 형성된다.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인허가 제도에 의해 독점이 형성된 것이며 지대(rent :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는 데 따라서 정상이윤[기회비용] 이상으로 얻게 되는 초과이윤)가 발생하므로 지대추구행위(로비활동)와 이에 따른 포획이 나타날 수 있다. 제도적 독점 하에서의 후생손실(사회적 낭비)은 시장실패 상황인 독점의 경우보다 훨씬 커진다(털록의 사다리꼴[Tullock Trapezoid]).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의 독점이윤은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생산적 용도로 쓸 수 있으나 정부의 인허가제 운영에 의한 제도적 독점에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지대추구)되어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답 ⑤

관련기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회9급

- ① 지대추구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배타적 이익은 지대에 해당한다.
- ② X-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자원낭비를 지칭한다.
- ③ 공유재의 비극은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지만 소비의 경합성은 없는 재화의 과소비와 고갈을 의미한다.
- ④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이다.
- 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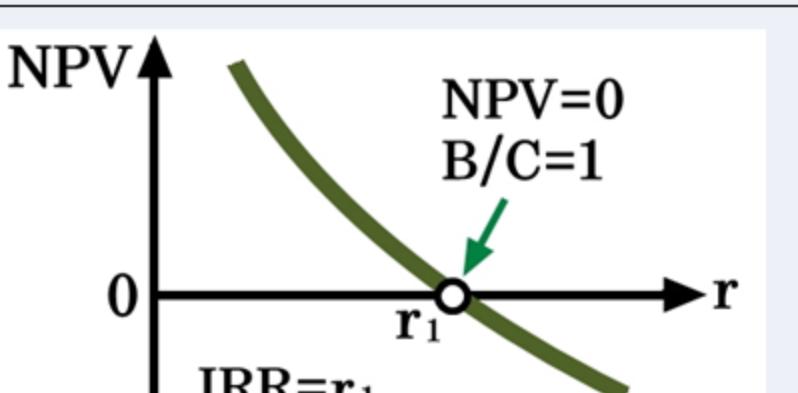
2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체적 예산결정시 대안 탐색에 사용된다.
- ② 내부수익률은 편익-비용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③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를 적용해 계층별 순편익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는 커진다.
- ⑤ 현실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해설

- ① (O) 총체적 예산결정(합리주의 예산결정)에서 대안의 비교·평가에 사용된다.
- ② (O) ■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③ (O) NPV와 B/C비율은 할인율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지만 IRR은 할인율을 몰라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투자수익률(주관적 기대수익률)로서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성격,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때그때 결정.
 ④ (O) 투자여부 판단기준 : $IRR > RRR$. IRR은 객관적으로 설정된 지표인 요구수익률(RRR : required rate of return ; 기준수익률·필수수익률)보다 더 높을 경우 투자가치가 있음. 복수의 대안인 경우 IRR이 가장 큰 사업을 선택.
 ⑤ (O) IRR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NPV = 0$ 또는 $B/C = 1$)하게 만드는 할인율. 투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총비용을 회수하여 최소한의 손익분기점 상황을 유지한다고 할 때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 ③ (O) 공공투자사업은 사회계층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예) 공공 골프장 설치는 고소득층에게 더 편익, 지하철 확충은 저소득층에게 더 편익). 비용편익분석은 분배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총편익·총비용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편익분석(social cost benefit analysis)은 계층별로 분배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를 부여하여 소득분배효과를 고려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비용편익분석은 투자의 효율성에 관한 판단으로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사회적 후생 증가가 나타나지만 반드시 소득분배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그룹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적절한 사회 가중치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편익은 높은 가중치, 고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편익에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공공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판정되므로 공평성을 고려하여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그러나 주요변수의 선정, 변수에 대한 자료의 구득가능성, 분석능력이 어려움 등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 ④ (x)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 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할인율과 현재가치는 반비례하여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비용이 같다면 할인율이 낮으면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할인율이 높으면 단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유리하게 평가된다.

$$\cdot C_0 : \text{현재연도 비용}, C_n : n\text{년도 비용}, B_0 : \text{현재연도 편익}, B_n : n\text{년도 편익}, r : \text{할인율}$$

$$\cdot \text{총비용의 현재가치} (\text{present cost}) = C_0 + \frac{C_1}{1+r} + \frac{C_2}{(1+r)^2} + \frac{C_3}{(1+r)^3} + \dots + \frac{C_n}{(1+r)^n} = \sum_{i=0}^n \frac{C_i}{(1+r)^i}$$

$$\cdot \text{총편익의 현재가치} (\text{present benefit}) = B_0 + \frac{B_1}{1+r} + \frac{B_2}{(1+r)^2} + \frac{B_3}{(1+r)^3} + \dots + \frac{B_n}{(1+r)^n} = \sum_{i=0}^n \frac{B_i}{(1+r)^i}$$

- ⑤ (O) 현실에서는 의도적인 왜곡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므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공공사업의 주체가 되는 정부의 부서가 그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관료들은 우선 사업을 벌이고 보자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편익을 부풀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편익을 부풀렸던 것을 볼 수 있다.

답 ④

관련기출

1.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2021 국가9급

-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① ①, ②

② ①, ④

③ ②, ⑤

④ ①, ②, ④

2.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답 1. ② 2.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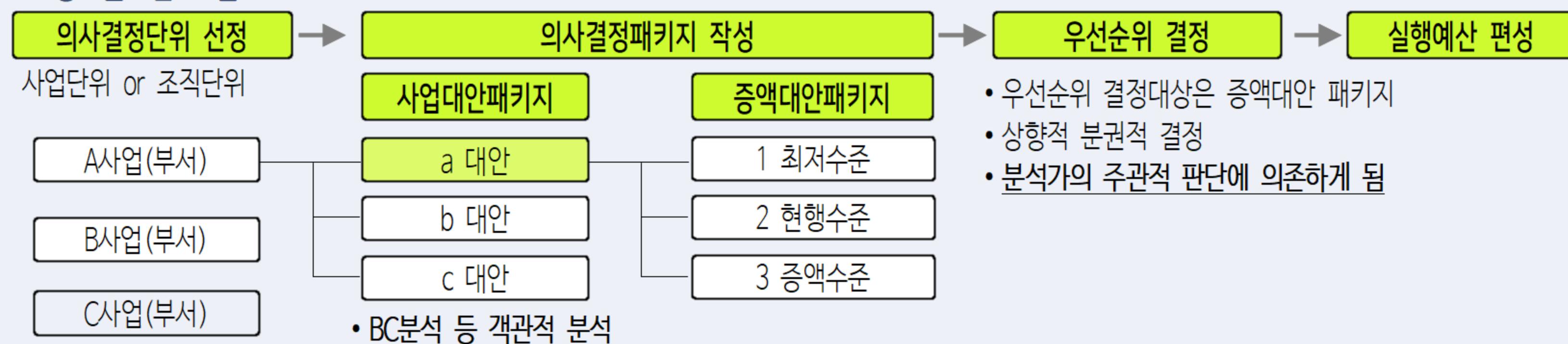
21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 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과거 연도의 예산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 동일 사업에 대해 예산배분 수준별로 예산이 편성된다.
- 계속사업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
-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에 특히 효과적이다.

해설

- ① (O) 의사결정항목이 많고 기준이 모호하여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고, 시간 부족으로 인해 우선순위 결정시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 영기준예산의 절차



- ②④ (O) 점증주의 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예산의 합리적 삭감을 통해 자원난 극복에 기여하는 감축지향적 예산이다.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한다.

- ③ (O) 동일 사업에 대해 전년도보다 더 낮은 수준(최저수준), 동일 수준(현행수준), 더 높은 수준(증액수준)으로 각각 나누어 예산배분 수준별로 비교·평가 후 예산이 편성된다.

- ⑤ (X) 공공부문에서는 국방비, 인건비, 교육비 등 경직성 업무나 경비가 많고 국민생활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령상의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용이하지 않아 영기준예산의 적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답 ⑤

관련기출

1. 영기준 예산(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사회복지9급

-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 전년도 담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 계속사업 분석에 치중해 신규사업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

2.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이 제약된다.
- 영기준예산제도는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담습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 영기준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집권화되어 있다.

3. ZBB(영기준 예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2015 군무원

-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프로그래밍을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 점증주의 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예산의 합리적 삭감을 통해 자원난 극복에 기여하는 감축지향적 예산이다.
- 기본 단위인 Decision unit는 조직 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 편성의 결정권을 갖는 사업단위 또는 조직단위이다.
-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 한다.

답 1. ① 2. ④ 3. ①

22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 실체설은 공익 과정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 ②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한 공익의 보장은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
- ③ 기초주의(foundationalism) 인식론은 공익 실체설에 가깝다.
- ④ 공공재의 존재와 공유지 비극의 문제는 공익 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⑤ 다원적 민주주의에 나타나는 이익집단 사이의 상호조정 과정에 의한 정책결정은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

해설

- ① (×) 실체설은 공익개념으로서 전체효용의 극대화, 도덕적 절대가치, 공유하는 이익 등을 주장하지만, 과정설은 이러한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과 통합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象徵的修辭, symbolic rhetoric)로 간주한다.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 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행정의 정당성·통합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 ②⑤ (○) 과정설에 따르면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 태협·조정의 결과이다. 공익은 제도나 절차·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사회집단 간 태협·협상·투쟁을 통해 내용이 변형된다. 공익은 상호경쟁적·대립적인 이익이 조정과 균형된 결과이므로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며 적법절차를 강조한다. 따라서 투입기능이 활발하고 다원화된 선진국에 적용될 수 있다.
- ③ (○) 기초주의(foundationalism)는 토대주의 정초주의[定礎主義]는 정당화된 믿음이나 건전한 전제로부터 추론된 결론과 같이 확실한 기초에 의존하는 인식론을 의미하며 이는 실체설 중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 가깝다.
- ④ (○) 과정설은 공공재의 존재와 공유지의 비극 등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 요소를 간과한다. 즉 치안·국방 등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면 과소공급되어 전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없다. 또한 개인이 사익 극대화만 추구하면 공익의 극대화될 수 없고,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도 공멸하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규율이 필요하며 이는 공익 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답 ①

관련기출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2 군무원9급

- ①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결정의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 ②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로 본다.
- ③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돋는 조정자의 역할로 이해한다.
- ④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답 ①

23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 역량 계발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학습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② 교수(teaching) 중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현장 체험식 교육훈련을 추가해야 한다.
- ③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통해 교육효과성 평가와 환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⑤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피훈련자, 관리자, 감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해설

- ① (○), ② (×)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 교수(教授, teaching) 체제(강의식·주입식)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인 학습(learning)과 체험식·토론식·참여식 방식을 통한 역량중심의 교육훈련기법(학습조직, action learning, mentoring, work-out program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통적 교육방법과 액션러닝

범주	전통적 교육방법	액션러닝
패러다임	공급자 중심 교수(teaching)(강사의 상대적 우월성) - 가르치는 교육	수요자 중심 학습(learning)(학습활동의 중요성) - 배우는 학습
철학	문제 상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소수의 내·외부 전문가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전문가
목적	지식·기술의 습득, 태도·행동의 변화 (현장과 관련성이 적은 전통적인 내용 중시)	실제적 문제해결을 통한 학습 (현장중심의 비구조적 문제 또는 기회의 해결 및 발견)
교육방법	주입식 교육 / 집합식 면대면 교육을 통한 이론과 실천의 분리	참여식 교육 / 실천과 성찰 미팅을 통한 이론과 실천의 통합
참여 주체	학습자, 교수자	팀 구성원, 러닝코치, 현업부서장, 과제 관련 이해 당사자
교육생의 역할	수동적 지식 흡수자	적극적인 참여자

■ 직무중심 접근에서 역량중심 접근으로 전환

구분	직무중심(ISD : 교수[教授]체제 개발)	역량중심(CBC : 역량기반교육훈련)
초점	직무 및 현안과제(Task)	성과 및 역량(Competency)
목적	직무수행상 현안과제의 해결안 제시 ⇨ 개인 지식·기술 향상	바람직한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한 해결안 제시 ⇨ 조직성과 향상
분석	교육수요 발생 직무에 대한 격차(gap)	조직 성과 창출에 필요한 역량
포인트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에 대한 격차 분석	조직 내 고성과자 역량 수준과의 격차 분석
해결대안	교육체계·과정 개발	다양한 학습지원책 개발
학습내용	직무수행상 보완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평가기준	직무수행의 충실통	조직차원의 경쟁력 제고

답 ②

24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삽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예산편성-예산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으로 이루어진 예산 주기는 1년이다.
-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작성된다.
- ⑤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fiscal year)라 한다.

해설

① (O) 국회법 제84조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삽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cf) **헌법 제92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O)

•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X), ⑤ (O)

• **예산주기(budget cycle, 예산순기)** : 예산과정의 4단계(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회계검사)가 시간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반복되는 과정 예산주기가 반복되므로 예산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여, 사업의 제안·심사에 반영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예산주기는 3년(2023년에는 2022년도의 결산, 2023년도 예산의 집행, 2024년도 예산의 편성·심의가 이뤄짐)

• **회계연도(fiscal year)** : 예산의 유효기간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간.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년(1.1.~12.31.)

예산주기(budget cycle, 예산순기) : 3년			
FY - 1년	FY(회계연도) : 1년	FY + 1년	
예산편성(행정부-기획재정부)	예산심의(국회)	예산집행(각 기관)	결산 및 회계검사(기획재정부, 감사원[결산검사], 국회[결산승인])

④ (O)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예산의 단년도 시계를 확장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해당 회계연도부터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 재원배분 및 투자계획 등을 제시하는 재정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

답 ③

관련기출

1.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는 동시에 진행된다.
- ②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없다.
- ④ 예산과정에 있어 본회의는 형식적 성격이 강하다.
- ⑤ 예산주기는 3년이다.

2.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21 지방7급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 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 년이다.

	㉠	㉡	㉢	㉣
①	10	3	10	1
②	5	3	10	3
③	5	5	20	1
④	10	5	20	3

답 1. ① 2. ②

25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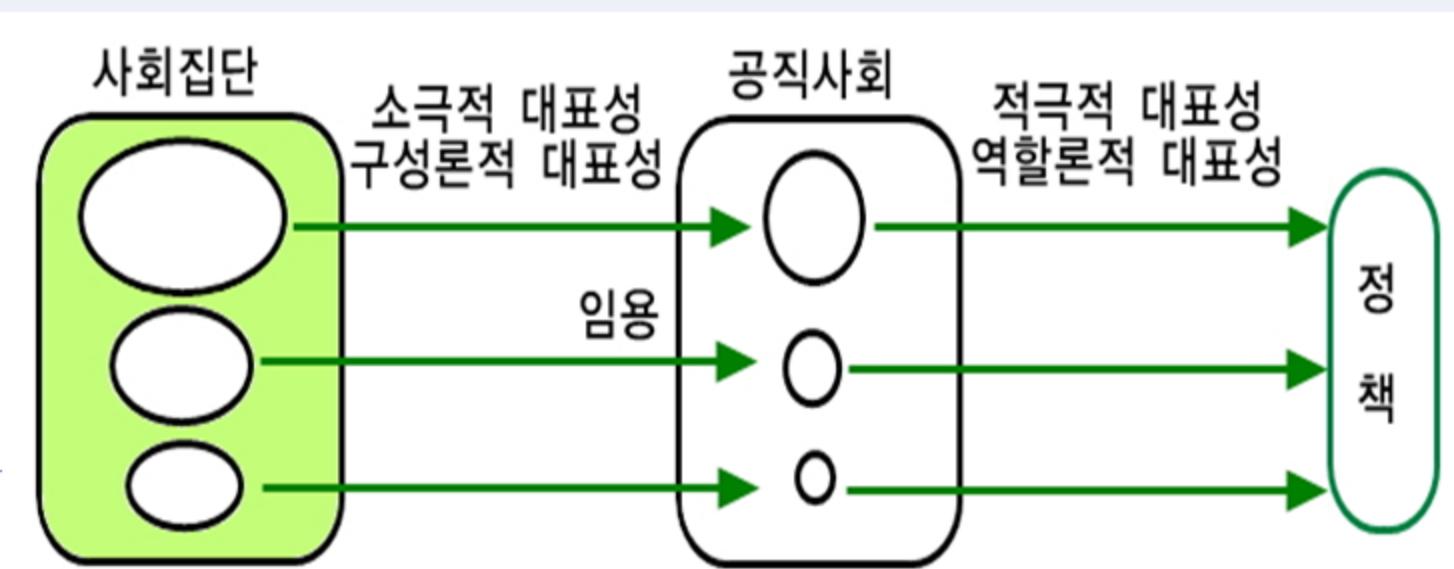
- ① 개인의 출신 및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 등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② 대표관료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 ③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행정능률성을 제고한다.
- ⑤ 정부 관료의 중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설

①⑤ (O)

소극적·수동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on) 구성론적·비례적·배경적 대표성, 형식적 대표성(standing for)	적극적·능동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on) 역할론적·태도적·정책적 대표성, 실질적 대표성(acting for)
출신성분이 관료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전제 - 형식적인 비례분포에 중점 (인적 구성의 균형·사회적 대표성)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전제(임용 전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태도가 공식적 역할자로서의 관료의 실제 행동으로 연결) - 실질적인 대표기능에 중점(정치적·정책적 대표성)
전체사회 인구 구성의 특성을 그대로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구성 측면. 관료제의 모든 계층과 직위에 각 사회집단이 비례적으로 대표되는 것. 관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상징적으로만 대표함.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출신집단·출신계층·출신지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는 것. 상호견제를 통해 비공식적 내부통제 작용을 하며 조직 전체가 소속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기여.
수직적 형평성은 확보하나 역차별로 인해 수평적 형평성 저해	수직적 형평성은 확보하나 능률성·전문성·객관성·합리성은 저해

- 대표관료제의 기본가정 :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연결됨(사회적 대표성이 정치적·정책적 대표성을 확보) – 관료와 국민사이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유사성의 정도와 그들 간 정책태도 또는 정책선회의 유사성의 정도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정(공무원의 행태는 자신과 출신배경을 같이 하는 집단의 가치와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 각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의 상호조정과 탐욕을 거쳐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산출됨)



- ② (O) 모든 사회계층, 특히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공직진출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결과적 평등)하며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고 반사회적 성향을 중화시켜 사회적 형평성(수직적 형평성) 확보에 기여한다(실적제의 폐단 시정)
- ④ (X), ⑤ (O) 사회 각 계층에서 고르게 선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대표관료제는 민주성·대응성·책임성·수직적 형평성은 향상시키는 반면, 실적과 자격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발(실적주의 원칙)이 아니므로 수평적 형평성·합리성·객관성·능률성·생산성·전문성을 저해한다.

▣ 대표관료제의 특징 구별

대표관료제의 특징인 것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대표성·대응성·책임성·민주성	전문성·능률성·생산성, 대내적 민주성 확보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윤리와의 조화, 형식적 기회균등
결과의 평등 / 수직적 평등의 확보, 수평적 평등의 저해(역차별) 우려	기회의 평등 / 수평적 평등의 확보, 수직적 평등의 저해, 역차별 방지
내부통제, 비공식적 통제의 방법, 민중통제(외부통제)의 내재화	외부통제, 공식통제의 방법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	공개경쟁채용시험, 선거를 통한 임용, 실적과 능력 중시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적극적 인사행정, 정치적 임용 가능	엽관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의 강화, 실적주의와 양립 불가 정치적 임용 배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집단중심의 사고	개인주의·자유주의의 강화,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를 고려 못함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의 고려

답 (4)

관련기술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9급(1)

-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 ②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③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 ④ 우리나라에는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8급

- ①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반영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하였다.
- ② 크랜츠(Kranz)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여 관료제 내의 출신집단별 구성비율이 총인구 구성비율과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 비율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③ 대표관료제의 장점은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반영하는 소극적 측면의 확보를 통해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 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023년 국회직 8급 행정학

3.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7급

- ①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실적주의와 조화되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다.
- ③ 할당제 등으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④ 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은 민주주의에 반할 위험도 존재한다.

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5 경찰간부+2017 경찰승진

- ①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크랜츠(H. Kranz)이며 킹슬리(D. Kingsley)는 비례대표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 ②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정부정책의 대응성과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소극적 대표성이란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 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⑤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5.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경찰승진

- ①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를 민주화하는 데 기여하고,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 ②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직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추구하는 작은 정부에서 채택하기 쉽다.
- ③ 채용 전과 후의 이해관계가 변화할 수 있고 자기의 신념도 바뀔 수 있다는 재사회화 현상을 충분히 고려한다.
- ④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6.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9급

- ①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 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한다.
- ②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 ④ 할당제를 구현하므로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 ⑤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7.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서울9급

- ① 소수집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 ③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 ④ 역차별 문제를 유발한다.
- ⑤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8.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0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①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사회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기 보다 개인의 능력 위주로 관료제를 구성한다.
- ③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④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봉쇄되는 제도이다.
- ⑤ 실적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9. 대표관료제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2022 경찰간부

- ① 관료들이 그들의 출신, 배경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 ② 대표관료제를 실현하기 위해 실적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전문성과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는 무관하다.

▣ 1. ③ 2. ③ 3. ② 4. ① 5. ④ 6. ④ 7. ③ 8. ③ 9. ③